

IMF, 대아르헨티나 차관상환 부분 유예조치 결정

□ IMF,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 차관상환 유예조치 결정

- 지난 7월 2일, IMF와 미주개발은행(IDB)은 아르헨티나에 대해, 7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16억 달러의 차관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함.
- IMF 켈러 총재는 이번 조치가 파산법 개정과 경제혼란야기법 폐지 등 법·제도 개혁 부문에서의 만족할 만한 성과에 기인하였다고 표명하고, 긴축정책 추진, 효과적인 통화정책 제시, 은행부실화 정리,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립 등 추가 중점 개혁사항을 제시함.

□ 차관상환 유예조치 협상 경과

-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된 IMF실무단과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협상에서 IMF는 예금동결조치 조기해제 반대, 지방채 발행 중단,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남용 중지 등을 아르헨티나 정부에 요구함.
- 이에 대해,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시점에서 강력한 긴축통화·재정정책은 사회 불안을 가중시켜 현정부의 정책수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함에 따라 협상은 난항을 겪음.
- 결국, IMF와 100억 달러 차관도입 및 상환유예 조치에 관한 협상은 무위로 끝나고, 7월에 기일이 도래하는 IMF 및 IDB 차관 원리금 16억 달러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됨.

-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라바나 경제부 장관을 워싱턴에 급파하여 차관상환 연장 및 추가금융지원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였고, 아르헨티나 측이 통화·재정정책에서 일부 정책기조의 변경을 시사하면서 IMF의 9억 달러·미주개발은행(IDB)의 7억 달러에 대한 차관상환 연기 및 추가협상 실무단 파견에 합의하기에 이룸.

□ 향후 전망

- 금번 차관상환 유예조치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당분간 유동성의 여유를 갖게 되었으나,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상환해야 할 차관 액수가 100억 달러에 달해 IMF와의 추가 금융지원 및 상환유예 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.
- 비록 동국 정부가 파산법 개정 및 경제혼란야기법 폐지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IMF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이행하였지만, 추가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인 긴축 통화·재정정책, 금융거래 정상화 등에 대한 마땅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, IMF의 추가 구제금융 제공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- 그러나, 현시점에서 아르헨티나발 경제위기가 브라질, 우루과이 등 남미 지역에 급속히 파급되고 있고, 이에 대한 IMF 책임론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대두되고 있어, 추가 실무단 파견에 따른 금융지원 협상은 이전에 비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책임 연구원 최성규 (☎3779-6665)
E-mail : ppio93@koreaexim.go.kr